

# 수술실 CCTV 의무화... "영상유출 걱정돼"

### 오늘 세계 첫 수술실CCTV 의무화 의료계 "기본권 침해" 반대 여전해 환자 "의료사고 진실 규명 한계있어"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혼동만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은 촬영 영상 유출, CCTV 영상 보관 기간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2분기 기준 총 8777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다. 이 중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로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병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

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기관도 촬영 영상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만에 하나 유출되더라도 하면 병원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성형외과의 경우 신체가 노출되는 전신 지방 흡입이나 가슴 수술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정부는 의료법에 영상 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규정했지만, 해킹, 외부인 침입, 내부 직원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불만이다. 환자들은 영상 유

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면서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이 유령 수술·무자격자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의료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에 수술 중 영상 촬영을 요청하면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령 의료기관은 응급 또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서선욱기자



### 완도해경, 지휘관 주만 주말 낚시어선 조업 현장 점검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관내 완도파출소를 방문해 가을 성어기 및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대비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위해 해상 치안 현장을 살펴봤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해경, 추석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고흥경찰, 도로변 풀베기로 교통사고 예방 총력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에서는 최근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보행자, 전동휠체어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경찰, 추석 명절 희망 세상 만들기 위문 행사 가져

광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광양 YWCA 무료급식소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담양소방,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담양소방서는 지난 22일 담양시장 등 3개소에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동부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자동훈련 실시

광주동부소방서는 지난 22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자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추석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432곳 주차 허용

오는 28일부터 옛새간...주차요원 현장 배치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옛새 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 허용 구간은 총 432곳이다.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3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 299곳

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 시설 밀집지역 등은 제외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64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1곳, 대구 25곳, 인천 24곳, 부산 21곳, 충북 16곳, 대전·전북 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최법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 예쁜 한복이 너무 많아요

추석을 맞을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있다. 뉴스

### '팬 모금' 1600만원 끌격... 아이돌 팬카페 운영자 실형

팬들이 보낸 모금액을 빼돌리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1600여만원을 쟁긴 20대 아이돌그룹 팬카페 운영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자들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후, 이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원, 10만원 등을 수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A씨는 14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스티븐 사진 촬영 비용, 아이돌 굿즈 판매비용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쟁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147명이고 편취액이 1662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